

정치권, 명태균 ‘김건희 추정 카톡’ 공개 일파만파

명씨 ‘오빠 용서해달라’ 대화 공개
조국 “대통령실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특검 정당성 구체화 돼”
대통령실 “윤 아닌 김여사 친오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와 친분을 주장하고 있는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내용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공개하자, 특검의 정당성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

와의 문자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생생히 보여준다”며 “대선 과정에도 정권 출범 후 국정 운영에서도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고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철없고 무식한 오빠’는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반박했다”며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두 부부와 결별하는 날도, 죄값을 치르는 날도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 씨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캡처본을 올렸다.

공개된 캡처에는 ‘김건희 여사님(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장된 상대방이, 명 씨에게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 완전 의지하는 상황”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대화가 오간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카톡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해당 메시지 속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문자는 대통

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명 씨의 발언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의 해명 직후, 야권의 비판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만약 대통령실 해명대로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를 지칭한 것이라면 사태는 더 복잡해진다”며 “당시 대선이 말 그대로 ‘패밀리 비즈니스’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마치 수렴정정이 이런 것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여사가 가는 곳마다 논란이 생기고, 손대는 일마다 의혹이 생긴다”라며

“나날이 특검의 정당성은 구체화되고, 특검의 범위는 늘어간다. 민주당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수많은 의혹들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카톡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이 더 충격”이라며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해명한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식한 오빠’가 대통령이란 아니면 김 여사의 ‘친오빠’이든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도 부끄럽게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법사위, 24일 감사원 현장 국감

‘관저이전 회의록’ 제출 거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5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2차 현장 국정감사를 오는 24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 실시의 건과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특수활동비, 감사원

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은 회의록 공개는 감사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어렵게 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률까지 위배하면서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2차 현장 국정감사를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지만, 재석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해당 안건은 통과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청소년 도박중독 ‘온라인 카지노’ 폭증”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 을·사진)은 15일 “청소년들의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도)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하고, 이용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예방 교육과 치유·상담이 연계되도록 정책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도박은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59.0%)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은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200건, 2022년 594건, 2023년 1374 건, 올해 8 월말 기준 1563 건으로 이미 작년 수준을 크게 넘어 서며 폭발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자 중 17세~19세 비율이 80.5%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5.0%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14세~16세 청소년 비율은 12.8%에서 20.6%로 크게 증가했다.

조 의원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인철 “나주 인터넷진흥원 등 서울서 사업평가”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사진)은 15일 “나주로 이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본원이 아닌 서울에서 사업평가를 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지방 이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 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14년)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진전, 2015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대구,



2015년),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 2017년) 등 4개 기관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4372회의 사업평가 중 3263회(74.6%)가 본원이 아닌 서울에서 이뤄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3년간(2021~2023년) 본원에서 단 한 차례도 사업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는 “본원에서 사업평가를 수행하고 온라인 평가 방식을 도입해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상담 서비스 이용 연령대 점차 낮아져 17세~19세 비율은 줄어 들고 있지만, 14세~16세 청소년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모습이 담긴 우리 측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사진은 북한이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합참 제공

윤 대통령 “내년 3월부터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

“여야, 금투세 폐지 힘 모아달라” “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번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은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기조 전환과 건전재정 확립을 통한 경제 펀더멘털 강화, 외환 거래시간 연장 등을 노력의 하나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제지수’ 편입이 결정됐다”며 “정부 정책들이 올바른 방

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제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 줄 밑거름이 열렸다”며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며, 안정적 글로벌 국제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자금조달 비용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결과, 내년 3월부터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

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제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한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진숙,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사진)은 15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어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

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 유공자법 제 4조는 5·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뿐만 아니라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



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